

“올 보통교부세 도·시군 3976억 감소”

법인세 등 각종 세입 부족으로 세수 재추계 필요성 대두 도 “지방채 발행 없이 불요불급 예산삭감 등으로 운영”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정부의 법인세 세수가 감소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의 살림살이가 많이 축소되거나 절약된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29일 밝힌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르면 2024년 국세 수입 예산이 367.3조원이었으나 29.6조원의 결손이 예상되며, 이중 내국세 수입이 22.1조원(약 6.9% 감소)의 결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교부세는 전국적으로 4.3조원의 감소가 예상되며, 전북자치도에는 757억원

교부세의 감소가 예상된다. 전북자치도에서는 교부세 감소분에 대하여 2026년까지 정산하여 지방재정에 미치는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도록 건의하겠다고 했다.

전북자치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 재추계에 따른 교부세 감액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음을 정부에 지적하고, 지방교부세법 취지에 따라 교부세 감액 시기를 2026년으로 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의 경우 감액조정 대상액 4.3조원 중 올해 50% 수준인 2.1조 원만 교부

될 예정으로 있어 전북자치도에서 379억원, 14개 시군에서는 1,611억원 총 1,990억원의 교부세가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도에서는 이러한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여 적자재정으로 운용하지 않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는 알뜰하고 건실한 살림살이를 운영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확보, 농특회계 일반회계 통합,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 등 가용재원을 적극 발굴하여 370억원(세외수입 277억원, 특교세 재원 대체 및 농특회계 전입금 16억 등) 정도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자치도에서는 불요 불급한 사업

과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 자연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해 허리띠를 졸라맨 재정운영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도민 실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는 직접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알뜰하고 후대에 누를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전북도에서 재정운용을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접한 한 도민은 “전북자치도에서 제대로 예산운용을 하는 것 같아 믿음이 깊어졌다. 아무리 어려운 도정 살림살이라고 할지라도 후손에게 빚을 물려주는 형태의 방만한 재정 운용은 절대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29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10월 소통의 날'이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등 현안업무 추진에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내년 국비 확보에 총력 다하자”

김관영 도지사, '10월 소통의 날'서 최정목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장 특강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등 현안업무 추진에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며, 내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자치도는 29일 '10월 소통의 날'을 개최, 김관영 도지사가 900여 명의 도청 직원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갖고, 전복사랑 도민중수어 및 명사 초청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국정감사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치르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며, “특히 지난해 개최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가능한 일이었다”고 격려했다.

김 지사는 이어 “올해 정부 건전재정 기조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정감사에서

국도위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낸 만큼 세간 SOC 등 현안 사업 예산을 최대한 가져올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명사 초청 특강에서는 최정목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장이 ‘지역문제 해결과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라는 주제로 열띤 강의를 진행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9월 9일부터 2개월간 전북자치도의 실무수습을 마치고 11월 초 각 부처로 배치 예정인 국가직 수습사무관 15명을 대상으로 전복사랑 도민중수어식이 있었다. 전복사랑 도민대응 도내 관광·문화시설 할인 등 혜택이 부여되며, 부처 복귀 후에도 전북과의 소중한 연을 기억하고 전북 발전에 지속적으로 힘써 주길 바라는 취지로 수여했다.

/이만호 기자

이태원 참사 2주기 특조위, 기관 간 협업 부재 등 규명 과제

유가족, '진상규명' 요구 경찰 등 기관 간 협업 부재 용산 이전 영향 짚어야

29일 이태원 참사가 2주기를 맞은 가운데,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관련 공직자들의 형사책임 추궁에 초점이 맞춰졌다. 참사 원인 규명이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서울경찰청장 등 기관장 개인의 잘못에 집중됐다. 이에 따라 기관이 참사 전후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고 작동했는지 등 다른 원인 규명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주요 책임자들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진상규명을 통해 형사재판에서 가리지 못한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이태원 특별법이 공포·시행된 지 4개월 만인 지난달 23일 첫 발을 내딛었다. 특조위는 출범 직후 유가족들의 회로부터 1호 진상규명 조사신청서를 접수했다.

유가족들은 참사 이후부터 ‘진상규명’을 요구해왔다. 특히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이에 반발해 형사재판에서 규정하지 못한 사실을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정 수사가 인파 사고 위험 인지 미흡 등 참사의 표면적 원인을 찾는 데 주력했다면 특조위는 경찰 구경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기관 간 협업이 없는 점, 대통령 용산 이전이 경찰의 인파 사고 대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청장은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난 위험 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았으나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의 사고



현화하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예견가능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전 대비 대책 마련 단계, 사고 입방 단계, 사고 이후 발생 단계에서 모두 용산구청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태원 특조위는 진상규명을 통해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 구조적 요인을 살필 예정이다. 또한 참사에 대한 대통령실 이전 영향 가능성도 언급된 만큼, 대통령실도 조사대상 포함시켜 적극 규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서울경찰청에서 기동대 파견에 대한 요청을 받고 어디까지 보고가 됐고, 어디까지 의견교환을 했는지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야 할 것 같다”며 진상규

29일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2주기 추모식에서 유가족들이 희생자들의 영정에 헌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공, 공동취재)

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태원 특조위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기관 21곳에 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폐기 금지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폐기 금지요청한 자료는 참사일 기준 5년 전부터 각 기관이 생산한 참사 관련 문서와 도서, 전자문서 등이다.

기록물 폐기 금지요청한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을 비롯해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서울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등 21곳이다.

특조위 업무가 기관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각 기관 측의 협조도 중요하다. 그간 ‘진상규명’을 강조해온 야당에서

특조위 운영을 위한 예산과 인력 지원, 협조를 약속하는 이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끝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길에 앞장서겠다고 약속드린다”며 “특히 ‘꼬리 자르기’식 책임 회피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26일 열린 '10.29 이태원참사 2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해 “특조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과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날 국회 추모제 참석을 위해 제7차 특별조사위원회 회의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뉴스1

농어민 소득 안정 통한 농어촌 지속가능성 강화

민주 이원택 의원, '농어민 기본소득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은 지난 28일,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민 기본소득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별 농어민에게 일정한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농어업 및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도시와 농어촌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여 농어민의 기본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은 △농어민기본소득 권리 보장, △5년마다 농어민기

본소득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농어민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농업·발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포획·채취·양식·염전) 등 종사자에게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농어민기본소득에 대해 담보제공 및 압류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원택 의원은 “심각한 도농 양극화와 농어촌 소멸위기 등으로 농어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농어민 기본소득제를 통해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농어민기본소득법안’에는 이원택 의원을 포함한 임호선·윤준병·김문수·박홍배·정준호·조국·문대립·이병진·문금주·송옥주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재난안전 행정 선진화 방안 연구회, 선진지 답사 나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재난·안전 행정 선진화 방안 연구회(대표위원 이병연)는 지난 28일과 29일 1박 2일 일정으로 재난안전 정책 우수 답사를 위해 경남도청과 부산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벤치마킹은 재난 예방 및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 구축, 매뉴얼 정비, 재난 안전산업 육성 등 재난 안전 정책 우수 기관을 방문해 전북자치도 재난 안전 행정체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만호 기자

“지방교부세 교부 방식 개편하라”

문승우 도의회 의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사회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군산4)이 29일, 충남 보령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6차 임사회에서 지방재정 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지방교부세 교부 방식 개편을 촉구했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자체에 재정 불균형 해소 등을 목적으로 차등 지원하는 재원으로, 이중 보통교부세는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의 97%를 차지하며,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최근 정부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도 수조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

며, 이는 지난해 56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가량의 대규모 세수 부족으로 이어져 전북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재정 운용에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해 56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시 보통교부세 7.1조 원을 불용 처리하고 교부하지 않아 지방교부세 임의 삭감 문제로 인한 논란까지 일어난 바 있다. 올해 또한 기재부에서 교부세 삭감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져, 현재 전북을 행 규모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등 지방재정 위기의 심각성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이만호 기자



문승우 의장은 이날 임사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지자체의 자구책 마련을 촉구하는 정부의 ‘땀집식 처방’을 비판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올해 총액을 정상적으로 교부하고, 현행 내국세에 연동된 교부세 교부 방식의 대대적인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문 의장은 또한 인구 감소 및 지역 간 인구 편차가 갈수록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각 지자체가 합리적·효율적으로 재정을 행 규모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등 지방재정 위기의 심각성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지역 맞춤형 기본사회 정책 필요”

‘전북 백년포럼’ 16강… 경기도 지역 기본소득 사례 소개

전북연구원(원장 이만호)은 29일 오전 8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기본사회와 지역사회’를 주제로 전북 백년포럼 제16강을 열었다.

강연자로 나선 민주연구원 이한주 원장은 지역사회와 기본소득 정책의 관계 및 전북의 적용 가능성을 심도 있게 설명했다.

이 원장은 기본사회의 개념과 필요성을 설명하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들은 개별적이고 파편적으로 접근해서는 해결되기 쉽지 않으며 대전환의 문제설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저성장과 인구감소, 사회적 불평등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기본사회를 제안했다.

기본사회는 모든 시민이 소득,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목표로 하며, 지역사회 차원에서 자치와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과 농민 기본소득 사례를 소개하며, 전북 역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본소득 정책을 실험하고,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했다.

이 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적용 가능한 기본사회 정책 사례로 남성군 로자 보육 참여 유도로 공동 보육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이빠 육아휴직 장려금, 보편적 공공교통서비스 공급을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제공 등을 제안했다.

/이만호 기자